

<
-

3.30.() 13:30 , 3.31.()

포용적 청년정책을 위한 방향 탐색

2021. 3. 30.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센터 고재성

목 차

I 들어가며

1. 포용적 청년정책의 개념
2. 포용적 청년정책을 위한 필요조건
3. 포용적 청년정책의 방향 탐색

II 포용적 청년정책 방향과 의미

1. 사회적 합의 및 공감대 제고
2. 청년의 사회참여 활성화
3. 청년특성 유형화 및 맞춤형 지원
4. 지자체 및 온라인 전달체계 강화

III 나가며

1. 2021년 청년이 처한 현실
2. 포용적 청년정책을 위한 KEIS의 역할

I. 들어가며

1. 포용적 청년정책의 개념

청년기본법의 기본 이념

- <청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1항>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청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2항>

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

포용적 청년정책이란?

- 청년기본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정책
- 성인으로써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삶의 여건 조성을 지원하는 정책



2. 포용적 청년정책을 위한 필요조건

- 포용적 청년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포용적 청년정책의 전제조건



1

청년의 요구에 부합한 청년정책이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 청년은 상황 및 맥락에 따라 다양한 요구를 가짐.
- 청년 대상 설문조사 및 청년 참여 활성화를 통한 요구 수렴 필요

2

요구에 부합한 청년정책이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 단순 양적 확대는 정책의 유사·중복 문제 및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음.
- 같은 예산으로 보다 다양한 청년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필요

3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환류를 통해 청년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

- 청년정책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환류를 통해 효율성 및 효과성을 도모해야 함.
- 정보 수집 및 평가를 위해 타당하고 합리적인 청년정책 분류 및 평가 체계 마련 필요

3. 포용적 청년정책의 방향 탐색(1/2)

포용적 청년정책 방향 탐색을 위해,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 실태 및 정책 분석'을 주제로 4편의 연구 진행



3. 포용적 청년정책의 방향 탐색(2/2)

4편의 연구가 제시한 주요 시사점을 종합하여 총 4가지의 정책 방향 도출, 이 발표에서는 도출된 정책 방향의 내용과 의미를 제시하고자 함.



1 포용적 청년정책 실현을 위한 사회적 합의 및 공감대 제고 필요

2 청년참여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청년의 사회참여 활성화 필요

3 청년 특성별 유형화 및 맞춤형 정책 지원 필요

4 효율적 청년정책 전달을 위한 지자체 및 온라인 전달체계 강화 필요

II. 포용적 청년정책 방향과 의미

1. 사회적 합의 및 공감대 제고(1/2)

경제성보다 포용성, 형평성의 관점에서 합의 및 공감대 필요

📅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의 당위성에 대한 상이한 관점이 존재함

청년수당 관련 포퓰리즘 논란

SBS PiCK 2019.03.29. 네이버뉴스
[사실은] 논란의 청년수당, 근거 없는 포퓰리즘인가?
 그래서 누구 분석했나 보니까 청년수당을 받은 당사자들이었습니다. 매달 돈을 받는데 당연히 좋다고 답하겠죠. 이러니까 포퓰리즘 논란이 매년 반복되는 것 같습..

한국일보 15년 1년 2019.11.04. 네이버뉴스
청년수당, 사회제도 공백 메웠다
 3년 문제 전문가들은 만 19~34세 계층에 연 최대 300만원의 현금성 복지가 지원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시 청년수당의 의미, 확대의 필요성 및 효과, ...

* 자료: 네이버 검색(검색어: 청년수당, 검색일: 2021. 3. 15.)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과 전문가의 인식 차이



청년

포용성 및 형평성

- 채용의 공정성 강화 및 고용환경 개선 정책 강화 필요
- 진로교육의 기회 및 장학금 규모 확대 필요
- 청년대상 주거 공급 확대 필요

V S



전문가

효율성 및 경제성

고용

교육

주거

-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객관적 평가 및 환류체계 확대 필요
- 취약계층 교육기회 보장 및 학교-일자리 연계 강화 필요
- 대상(1인 가구, 초년생 등) 별 접근 정책 강화 필요

* 자료: 송수종 외(2020) '청년정책 현황 분석 연구'

1. 사회적 합의 및 공감대 제고(2/2)

| 경제성보다 포용성, 형평성의 관점에서 합의 및 공감대 필요

📋 2020년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삶 전반을 정책영역으로 규정

국외 사례 고찰 결과

- 스웨덴, 독일, 일본의 사례 고찰 결과, **고용과 복지 정책의 화학적 결합**을 통해 청년의 기본적인 삶 보장
 - 스웨덴: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한 중앙기구 설치(청년과이민자의일자리를위한대표단) 및 지자체를 통해 통합서비스 제공
 - 독일: 지자체의 다양한 기관(고용센터, 교육청, 자치단체, 청년단체)이 연계하여 통합서비스 제공(베를린 청년직업상담소 사례)

포용적
청년정책

고용
정책



복지
정책

학교-직업세계로의 이해 과정에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청년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정책으로써
청년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공감대 제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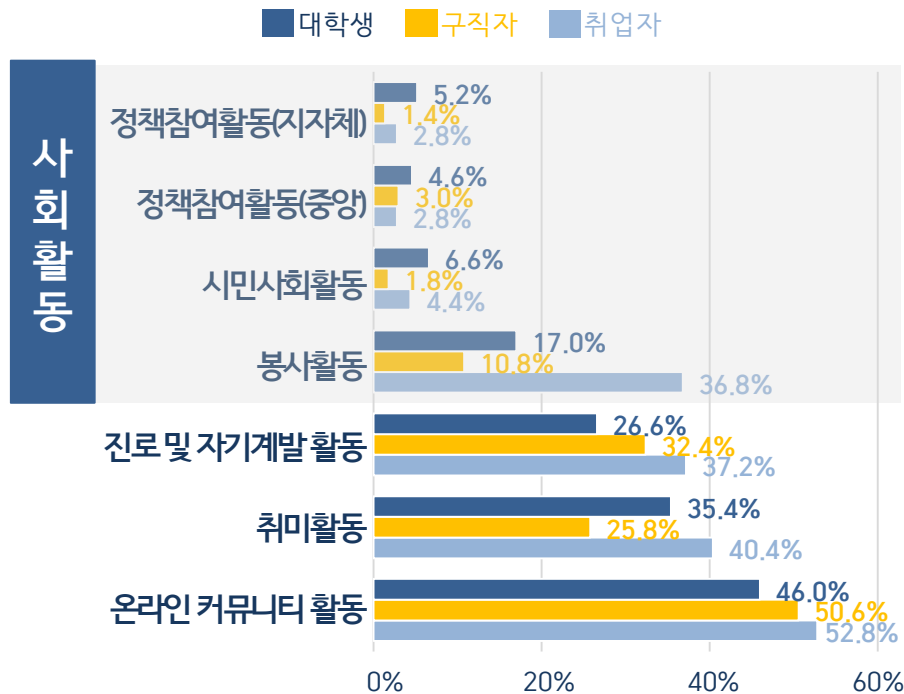
* 자료: 정연순 외(2020) '해외 청년 고용정책 실태 분석 및 정책 제언 연구'

2. 청년의 사회참여 활성화(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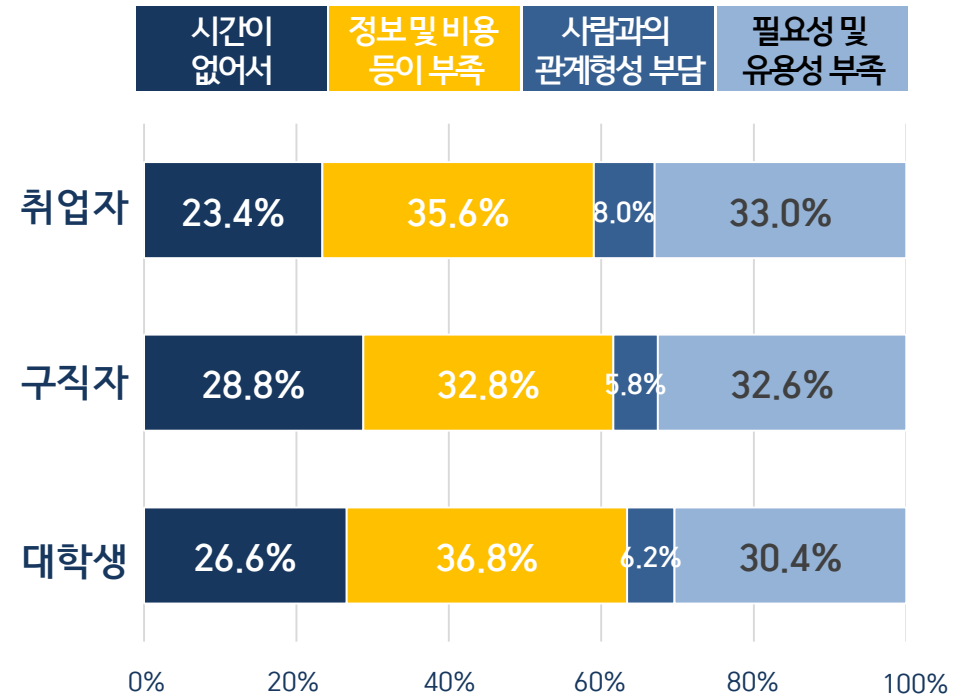
|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 필요

📋 청년, 특히 구직자의 사회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있음

최근 1년간 참여한 활동 분석 결과



사회활동 참여가 어려운 이유 분석 결과



* 사례수: 대학생 500명, 구직자 500명, 취업자 500명, 총 1,5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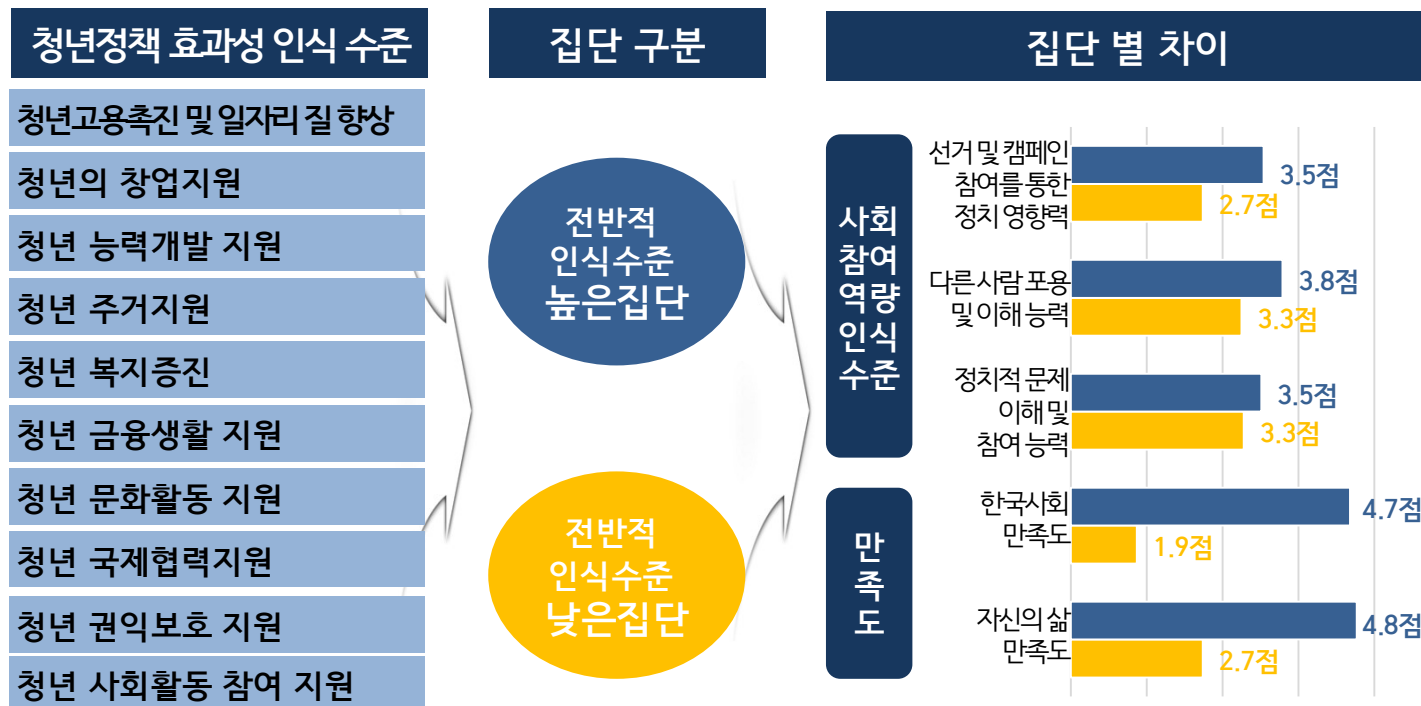
* 자료: 김강호 외(2020) '청년 사회생활 지원 실태 조사연구'

2. 청년의 사회참여 활성화(2/2)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 필요

청년의 사회참여는 단순 참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정책의 참여, 확산, 개선을 촉진

정책에 대한 인식과 사회참여역량의 관계 분석 결과



청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회참여 기회 확대 필요

정책 효과성 및 만족도 제고

* 자료 : 김강호 외(2020) '청년 사회생활 지원 실태 조사연구'

3. 청년특성 유형화 및 맞춤형 지원(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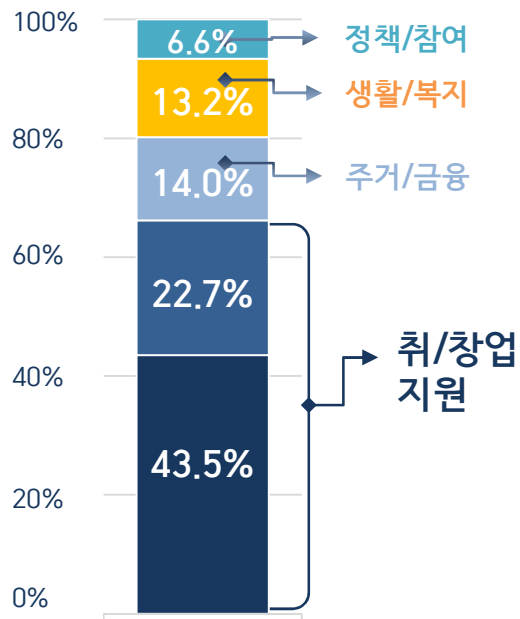
특성에 따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맞춤형 정책 지원 필요

❏ 취/창업 중심의 청년정책이 연령 및 학력에 따른 구분 없이 운영되고 있음

청년정책 현황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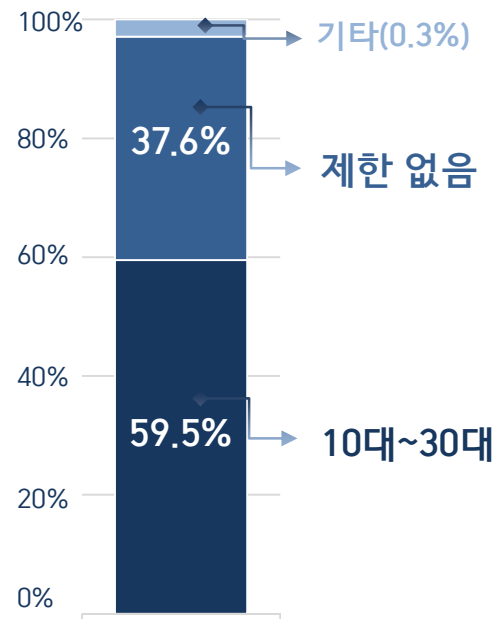
〈지원영역별 청년정책 분포〉

* N: 2,930개(중앙+지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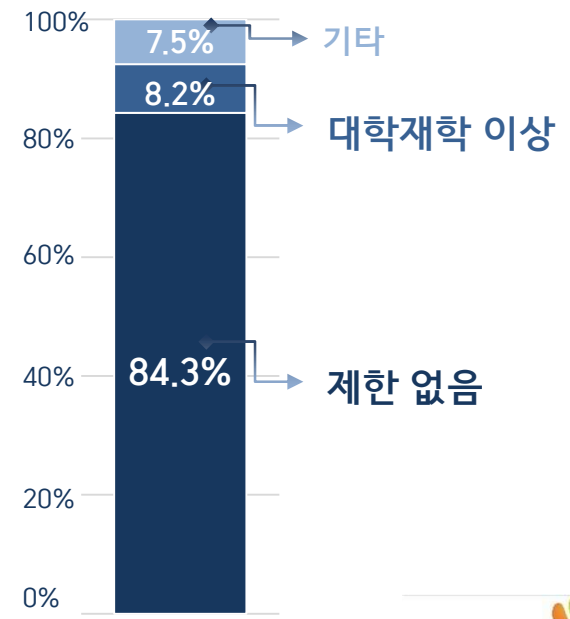
〈연령대별 청년정책 분포〉

* N: 2,691개(지자체만)



〈학력요건별 청년정책 분포〉

* N: 2,691개(지자체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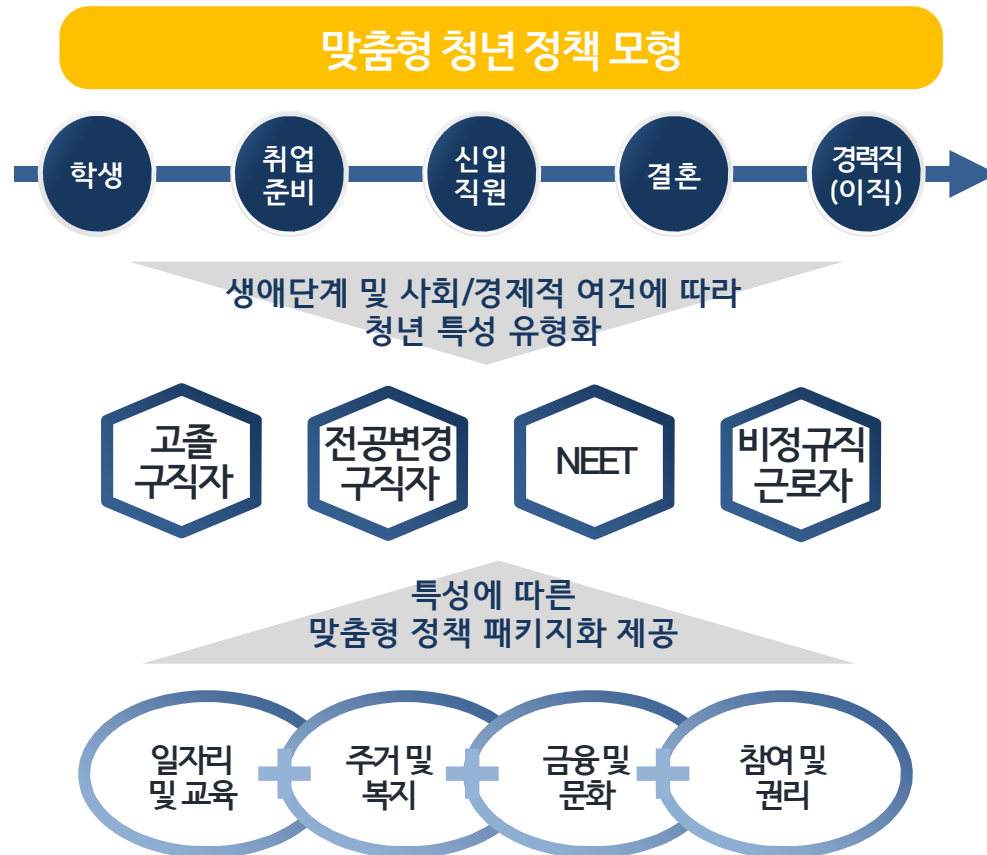
* 자료 : 김영현 외(2020) '청년정책 특성 분석 및 청년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연구'

3. 청년특성 유형화 및 맞춤형 지원(2/2)

| 특성에 따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맞춤형 정책 지원 필요

📋 생애단계 및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청년 유형화 및 맞춤형 청년정책 지원 필요

1



청년 대상별
세부 요구사항
유형화 및
정책 패키지화를
통해 포용적 청년정책
실현

4. 지자체 및 온라인 전달체계 강화(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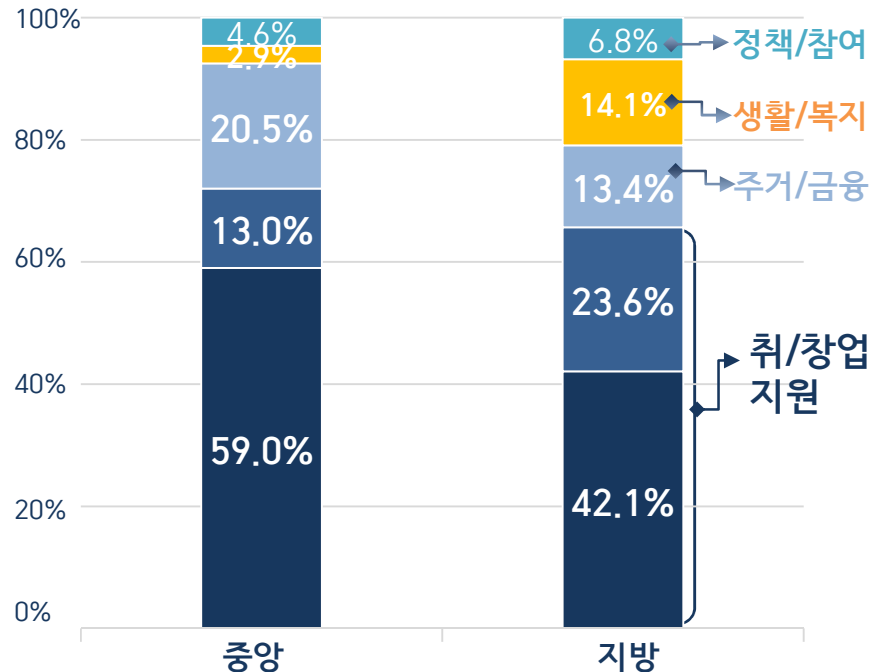
효율적 정책전달을 위한 지자체 및 온라인 전달체계 강화 필요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청년정책 실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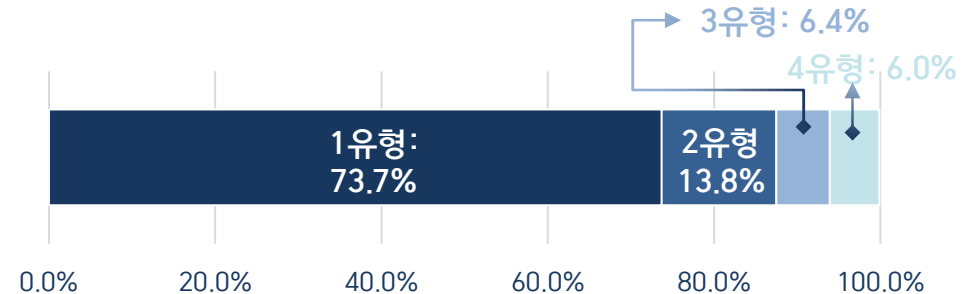
청년정책 현황 분석 결과

<중앙과 지방의 청년정책 유형 차이>

* N: 2,930개(중앙+지자체)



<군집분석 결과 도출된 청년정책 유형>



	주요 수단	주요 지원 영역	주체
1유형	통합지원	취업과 관련한 전반적 지원	지방
2유형	보조금 지원	주거 금융 중심 지원	
3유형	간접지원	청년 권리 및 정책 참여 지원	중앙
4유형		취업 중심 지원	

* 자료 : 김영현 외(2020) '청년정책 특성 분석 및 청년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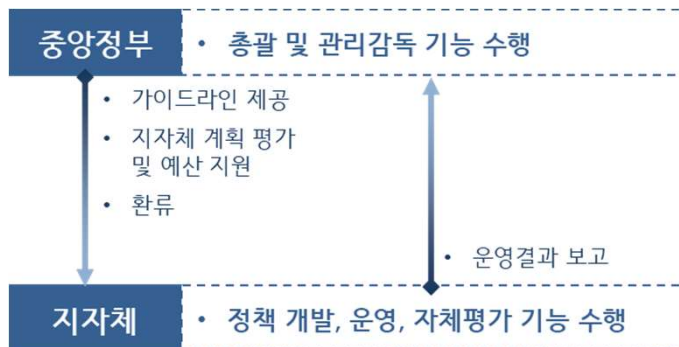
4. 지자체 및 온라인 전달체계 강화 (2/3)

| 효율적 정책전달을 위한 지자체 및 온라인 전달체계 강화 필요

📋 정부와 청년의 접점으로써 지자체가 청년정책을 개발·운영·환류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국외 사례 고찰 결과

- 스웨덴, 독일, 일본의 사례 고찰 결과, 중앙정부의 역할은 가이드라인 설정과 재정적 지원에 집중하고 그 내용의 구체적 실행은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
 - 스웨덴: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을 추진하면서 법령을 제정하여 지자체 참여시 재정적 인센티브 명시
 - 일본: 지방이양일괄법 등을 통해 지자체 통합서비스 활성화



청년 정책 실행에서 지자체의 역할 강화 필요

- 지역특성을 반영한 패키지 정책 개발 및 운영
- 사각지대 청년 발굴 및 참여 활성화
- 모니터링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환류

* 자료: 정연순 외(2020) '해외 청년 고용정책 실태 분석 및 정책 제언 연구'

4. 지자체 및 온라인 전달체계 강화 (3/3)

| 효율적 정책전달을 위한 지자체 및 온라인 전달체계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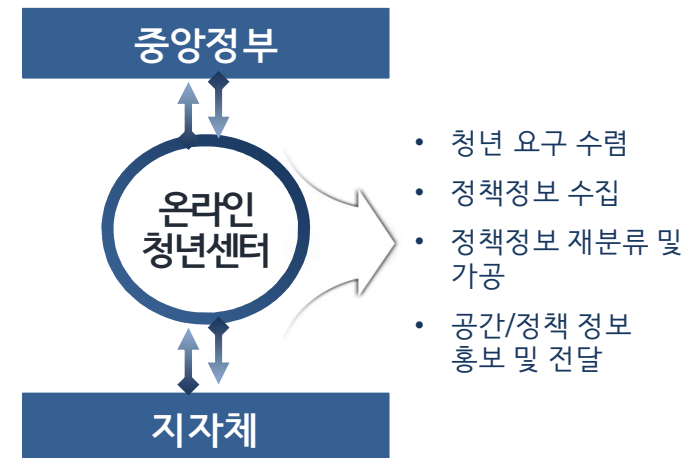
📋 포용적 청년정책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청년센터」 기능 확대 및 강화 필요

온라인 청년센터 발전방안 도출 결과

- 포용적 청년정책 실행을 위해서는 온라인 기능 강화를 통해 정책 실행 지원 필요

청년 맞춤형 정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력별, 노동시장지위별, 지역별 맞춤형 청년정책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중앙+지자체, 현금지원+현물서비스, 교육훈련+취업지원+주거금융+생활복지+정책참여 간의 정책 패키지를 구성하여 지원
청년의 사회참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기반 청년 참여 정책 포럼 및 라운드 테이블 사업을 지역별로 운영• 지역별 청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중앙과의 협업체계 구축
지자체 청년정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정보를 지역별로 구분하고 중앙과 지자체 정책비교를 통해 시사점 제공

KEIS 온라인청년센터 기능 확대 및 강화를 통해 포용적 청년정책 지원 필요



* 자료 : 김영원 외(2020) '청년정책 특성 분석 및 청년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연구'

III. 나가며

1. 2021년 청년이 처한 현실

코로나 시대의 K 청년

1

청년실신

- 청년은 실업자 아니면 신용불량자
- 경제활동지체에 따라 학비, 주거비, 생활비 부담 증가

2

알부자족

- 알바로 부족한 학비, 주거비, 생활비를 충당하는 청년
- 이러한 과정에서 취업포기자가 증가하고 있음
(‘19년 대비 ‘20년 24% 증가, 약 9만명)

3

벼락거지

- 주식/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청년
- 자산장벽으로 인해 꿈을 포기(상대적 박탈감)

4

문화실종

- 코로나로 인해 대분의 공연 및 문화활동 취소
- 청년문화의 실종은 한류산업에도 부정적 영향

우리사회의 미래이자
‘취약계층’으로써
청년 이해 필요

포용적 청년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

* 출처: MBC 뉴스 연속 기획, ‘코로나 시대의 K 청년’(2021. 1. 23. ~)

2. 포용적 청년정책을 위한 KEIS의 역할

01

연구 및 모니터링을
통한 청년정책
방안 탐색



- 청년고용정책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취약청년계층의 정책접근성 개선방안 마련
- 주요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수행
- 청년고용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초연구

02

청년정책 실행
지원 및 현장
네트워크 강화



-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청년단체와 현장소통
- 대학일자리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을 통한 청년정책 전달체계 기능 강화
- 지자체 청년센터 컨설팅 및 평가 실시, 관계자 역량강화 지원 및 우수 사례 발굴 확산

03

청년정책 효율적
전달을 위한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 강화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2조(청년정책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따라 「청년정책정보시스템」으로써의 법적 지위 확보 노력
- 접근성 및 활용도 향상을 위해 정보 수집 뿐만 아니라 정보 분석, 가공 및 맞춤형 제공 기능 강화
-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온라인 기반 청년 참여 기능 확대

포용적 청년정책 실현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감사 합니다
